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손기웅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현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CONTENTS

제7권 2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3년 1월

발 행 2013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오름

전화 02-585-9122, 9123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6
- 3. NGO 7
- 4. 분석 및 평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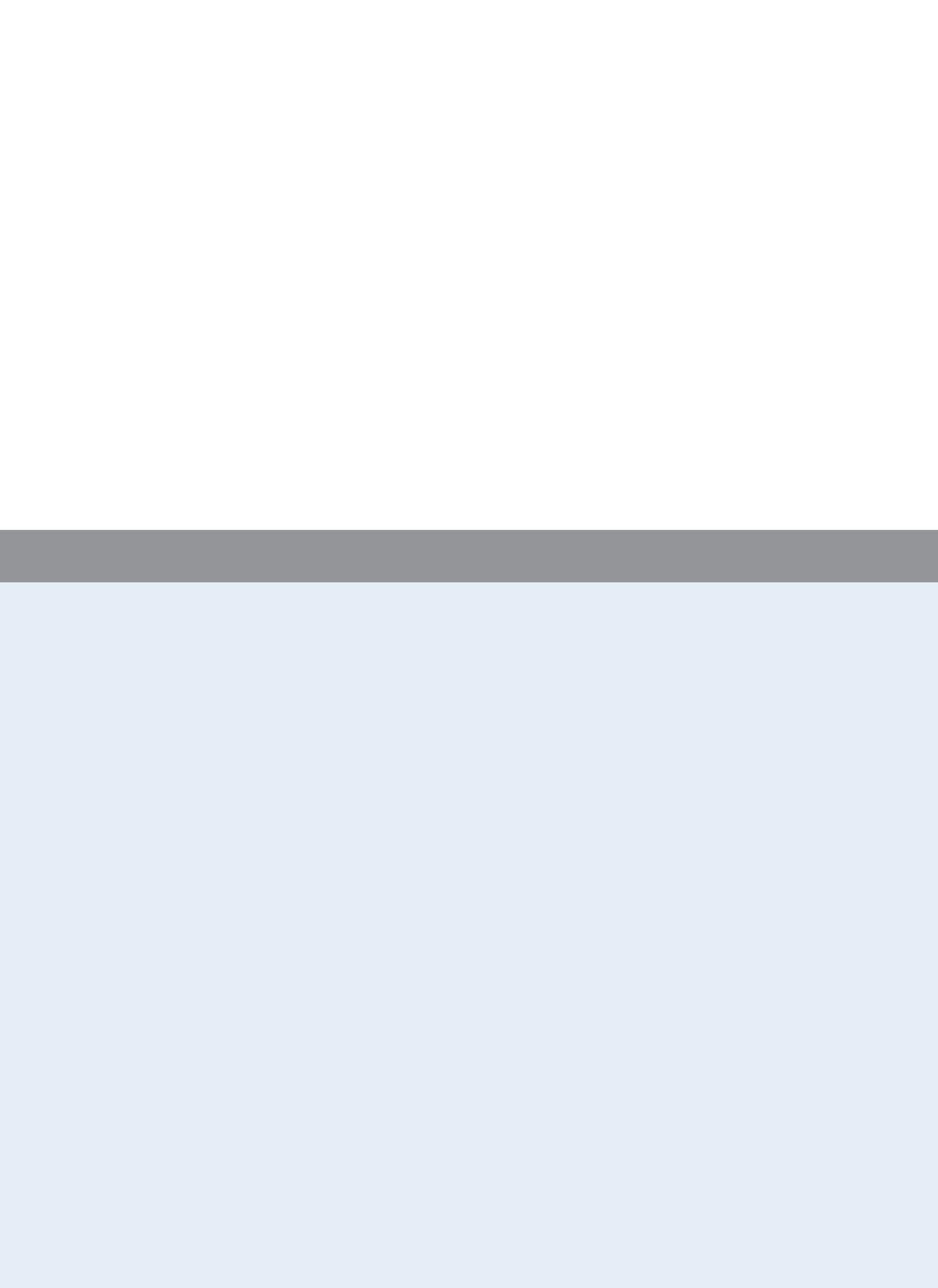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 2. 일본에 대한 반응 20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1
- 4. 남한에 대한 반응 22
- 5. 분석 및 평가 25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29
- 2. 납북자 37
- 3. 국군포로 40
- 4. 이산가족 40
- 5. 분석 및 평가 43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6
3. NGO	7
4. 분석 및 평가	15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국무장관, 북한 정치범수용소 언급

-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 주최 심포지엄 주제 연설을 통해 대량학살이 반드시 총포를 수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사례로 거론(7.24)

미국 국무부 차관보, 미·중 인권대화에서 탈북자 문제 제기

- 마이클 포즈너(Michael Posner)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17차 미·중 인권대화에서 탈북난민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공개(7.25)

미국 국무부, 2011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

- 미국 국무부는 ‘2011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재지정(7.30)
 - 동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종교집단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종교활동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강조

미국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통과

-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 통과(8.2)
 -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권고
 - 2012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
 -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8.17)
 - * 동 법안은 2012년 5월 하원 통과

차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인권 개선 강조

- 에드 로이스(Edward Randall Royce) 의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국인 북한인권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12.5)

나.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유럽연합, 북한인권 국제학술회의 개최

- 유럽연합은 2012년 '유럽연합-한국의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9.24~25)
 - 사업 시행 단체로 선정된 한스 자이텔 재단 서울사무소는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지식인연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영국 정부, 북한 인권상황 우려 전달

- 윌리엄 월레스(William Wallace) 상원 외교담당 대변인은 평양 주재 영국대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공개(10.26)

캐나다 연방하원 국제인권소위,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캐나다 연방하원 국제인권소위원회는 북한 관련 청문회 개최(10.25)
 -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법 제안

영국 의회,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영국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는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11.28)

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 북한인권 개선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은 연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회견(오슬로)에서 북한의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촉구(9.12)
-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10.4)
-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11.8)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민주주의포럼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11.10)
- 이명박 대통령은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는 선결 과제이지만 2천만이 넘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자유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11.20)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지속〉

-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주최로 ‘북한인권법 바로알기 토론회’ 개최(7.4)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제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먼 훗날, 어찌 보면 가까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7.4)
-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7.4)
- 선진통일당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7.24)

[표] 제19대 국회 북한인권법 발의 현황

법안 명칭	대표 발의 의원	발의 일자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새누리당)	06.01
북한인권법안	황진하(새누리당)	06.15
북한인권법안	이인제(새누리당)	08.20
북한인권법안	조명철(새누리당)	09.05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심재권(민주통합당)	11.15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창래(민주통합당)	11.19

2. 유엔과 국제협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언급

-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중국에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7.19)
 -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 방문 비자를 신청했으나 북한 측에서 방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공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통영의 딸' 문제해결 언급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새천년개발(MDG)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제고 역할' 간담회에서 북한에 강제 구금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규원 씨 문제해결 의지 표명(8.14)

유엔, 북한 어린이 영양 실태 조사

- 유엔과 북한은 9월 11일부터 한 달간 북한에서 종합영양 실태 조사 실시(9.11)
 -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실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 합의 채택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11.27)
 -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
 -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
 -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
 -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불참
 - 다만 중국은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 견지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제6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11.28)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12.6)
 -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최종 채택(12.20)

3. NGO

〈탈북자 인권보호 캠페인〉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 동시 다발 개최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9월 6일부터 격월로 첫째 주 목요일 정오(현재시각) 각국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집회 개최

한국 민간단체, 유엔 탈북난민 캠프 건립 추진

- 한국의 탈북자 인권단체인 세이브엔케이(Seibeenky)는 중국과 몽골 등지에 유엔이 운영하는 탈북난민 캠프를 건립을 추진하는 ‘유엔 탈북난민 캠프 추진위원회’ 발족(8.21)

전 세계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 동시 개최

- 전 세계 40개 나라 50여 개 도시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11.1)

LiNK, 탈북자 구출 활동 전개

-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는 2010년 2월부터 ‘탈북자 100명 구출 운동(The Hundred Campaign)’ 전개(12.28)
 - 2012년 12월까지 129명의 탈북자 구출

〈반인도범죄 처벌 및 진상조사〉

일본 민간단체, 한국의 인권단체 지지 모임 개최

-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한 한국의 인권단체를 지지하는 모임 개최(6.29)
 - * 스페인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국경을 초월해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 행사
 - * 스페인 법원은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1998년 대량학살과 고문 등의 반인륜적 인 범죄를 저지른 칠레의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요덕수용소 희생자 추모공원 설치 추진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 유린 실상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범수용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요덕 위령공원(가칭)’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표명(7.5)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요덕 기념공원(가칭)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8.1)

ICNK, 유엔에 청원서 제출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은 탈북자의 사연을 담은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8.24)

HRNK, 북한 정치범수용소 토론회 개최

-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링크(LiNK), 사이먼위젯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는 LA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관련 토론회 개최(10.12)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 설치 강조

-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13년에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10.12)

북한인권시민연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12.1)

〈신속자 석방 캠페인〉

오길남 씨, 딸 송환 호소 서신 전달

- 독일 체류 중 밀입북했다가 탈출한 오길남 박사는 북한에 남겨진 두 딸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우편함에 투입(6.28)
 - * 북한은 지난 4월 27일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에 “신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며 그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 발표

북한자유연대, 통영의 딸 석방촉구 캠페인 전개

- 북한자유연대는 유엔 북한대표부에 ‘통영의 딸’ 신속자 모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7.28)

〈영상 및 사진전 캠페인〉

북한인권영화제 개최

- 캐나다 토론토 Innis Town Hall에서 정치범수용소와 이산가족, 탈북자, 재일 한인 가족들의 아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7편의 영화 상영(7.6~8)

제2회 북한인권영화제 개최

- 뉴욕과 LA 라디오코리아, 버지니아 한인회는 공동으로 제2회 ‘북한인권영화제’ 개최 (7.18~24)
 - 워싱턴(7.18), 뉴욕(7.19), LA(7.24) 각각 개최
 - * 제1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201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캠페인 The Fact’ 전시회 개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3대 부자세습, 재중 탈북자 강제 복송, 대남 군사도발, 북한 내 한류 현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캠페인 The Fact’ 전시회 개최(7.11~17)

영화제작사 카네마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소재 영화 제작

- 영화제작사 키네마인은 서울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그린 37분짜리 단편영화 ‘숙녀와 수용소의 시사회’ 개최(7.13)

한국·유럽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소식지 발간

- 한국·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EKHR)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뉴스레터 발간(7.15)
 - 독일의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성통만사), NK지식인연대가 참여

통일시대사람들, 북한인권 그림 전시회 개최

-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시대사람들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광장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그림 전시회 개최(8.5)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런던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비렬(비열)하고 너절한 모략 광대극을 벌여놓고 있다”고 비난(8.11)

‘제2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필름포럼’에서 개최된 제2회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9편의 영화 상영(9.20~21)
 - ‘탈북자-자유와 인권을 향한 여정’(여행자, 약혼, 천국의 국경을 넘다2), ‘남북자-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메구미, 헤원아! 규원아!), ‘수용소-철조망을 건너라’(알바트로스, 숙녀와 수용소), ‘다큐-NGO초청전’(그래도 나는 탈북한다, People’s Crisis) 등
 -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헐뜯고 중상 모독하는 내용의 영화들이 대대적으로 상영된다”고 북한 인권국제영화제 비난(9.14)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 패당의 배후 조종 밑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얼마 전 서울에서 ‘제2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라는 것을 벌여놓고 ‘탈북자생활’이니 ‘수용소실태’니 하는 내용을 다뤘다는 반공화국 인권영화 9편을 상영해 우리(북한)를 헐악하게 중상 모독했다”고 비난(9.28)

남북한 대학생, ‘북한인권 사진전’ 개최

- 남북한의 대학생이 연합한 북한인권학회인 고려대학교의 리베르타스는 북한인권 사진전시회인 ‘The Fact’ 개최(9.25~26)

자유조선방송, 정치범수용소 관련 드라마 제작

- 민간 대북라디오방송인 자유조선방송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다룬 라디오 드라마 ‘수용소의 노래(30부작)’ 제작·방송(10.18)

〈입법 캠페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 탈북 고아 입양법 촉구 행사 개최

- 한인 기독교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orean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탈북 고아 입양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2012 햇불대회’ 개최(7.10~12)

〈인권회의 및 워크숍〉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청소년 워크숍 개최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워크숍 개최 (7.26)

북한인권시민연합, 인도네시아서 북한인권 회의 개최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회의 개최(8.9)
 -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브라질의 코넥타스(Conectas Direitos Humanos), 태국의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등이 공동으로 참여

성통만사, 유엔 ‘협약기구’ 지위 획득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심사 결과 각종 유엔 회의에 참석해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협약기구’ 지위 획득(8.9)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의 달’ 행사 개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로 이뤄진 ‘북한인권의 달 사업기획단’은 9월을 ‘북한인권의 달’로 지정(9.3)

성통만사, 북한 인권홍보 활동 전개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제네바 유엔본부 앞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9.10)

독한협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개최

- 독한협회 주관으로 독일 본(Bonn)과 에센(Essen)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개최(10.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유럽회의 개최

- 통일연구원, 영국의 헨리잭슨소사이어티와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런던에서 북한의 '민주화, 발전, 그리고 인권(Democrac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11.28~29)
 - 미국의 로버트 킹(Robert King) 대북인권특사, 칼 거쉬만(Carl Gershman)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회장, 김영호 한국 인권대사 등이 참여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선언' 선포 행사 개최

-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북한인권청년연합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인권선언'을 낭독(12.10)
 - "북한인권 개선의 3대 현안으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석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의 조건 없는 생사확인, 강제 북송 탈북자의 처벌 중지를 북한 정권에 요구한다"고 강조

일본 정부, 북한인권침해 계몽주간 행사 개최

- 일본 정부가 지정한 북한인권주간을 맞아 도쿄 등지에서 다양한 북한인권행사 개최 (12.10~16)
 -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납치문제 관련 행사와 정치범수용소 22호 보고회 등의 행사 개최
 - * 2006년 6월 23일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북한인권 침해문제를 계발하는 북한인권주간으로 지정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 인권 개선 활동〉

INHL 개최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 실태를 알리고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 창립 대회 개최(9.25)
 -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세계북한연구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국내 20개 탈북단체가 참여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발간〉

프리덤 하우스, 국가별 언론자유 실태 발표

-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국가별 언론자유 실태에 따르면, 북한은 197개 조사 대상국가 중 최하 점수인 97점을 기록해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10.12)
 - 언론자유에 대한 북한 내 법적 환경은 30점 만점 가운데 최하 점수인 30점, 정치적 환경은 40점 만점 가운데 38점, 경제 환경은 30점 만점 가운데 29점 기록

대한변협, ‘2012 북한인권백서’ 발간

- 대한변호사협회는 ‘2012 북한인권백서’ 발간(10.15)

국제인권단체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지 성명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10.19)

국제투명성기구, 북한을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지정

-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176개 나라의 청렴도를 조사한 연례 국제부패인식지수를 발표(12.5)
 -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지수를 0점으로 해서 100점까지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8점으로 소말리아와 함께 청렴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

4. 분석 및 평가

북한 반인도범죄 종식 활동 확산

-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잔혹한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활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국제적 활동을 확대함.
 - 하반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 등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고발하는 토론회를 활발하게 전개함.
 - 특히 김정은 제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함.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중심으로 반인도범죄 피해 사례를 수록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강화됨.
-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을 중심으로 북한 내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화함.
 - 휴먼 라이츠 워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외에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지지 확산

-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함.
 -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영화, 그림 등을 통한 북한인권 제고 활동 확대

- 국내에서 제2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등 영화를 통한 북한인권 관련 관심을 제고하려는 활동이 확대됨.
 - 캐나다 토론토, 미국의 워싱턴, LA 등 외국에서도 북한인권영화제를 개최함.
 - 정치범수용소를 소재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추진함.
-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사진전 행사를 통한 북한인권 관심 제고 활동 전개함.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강화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중국에 요구함.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확산함.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 인권유린 이슈 부상

-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 북한인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
 -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가 설립되는 등 국제적 연대 활동을 확산함.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2. 일본에 대한 반응	20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1
4. 남한에 대한 반응	22
5. 분석 및 평가	25

1. 미국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등, 미국의 북한인권 지적 비난

- 미국의 '세계 인권재판관행세'를 비난하며 "미국이 인권공세로 우리(北)를 눌러보려는 것은 망상"이라며 "미국의 인권공세에 혁명적 공세로 대응원칙 입장" 강조(7.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미국 국무성의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7.30)'와 '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7.31)' 발표 관련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발 및 "핵 억제력 더욱 강화" 강조(8.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파키스탄 내 무인기 공격 비난

-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상자가 발생(3,000여 명 사망자 중 테러분자는 2%에 불과)하였다"며 "민간인 학살만행을 자행하는 미국의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난(10.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등, 미국의 '인권유린범죄' 비난

- 미국의 국내외(노동문제·반테러전 등) '인권유린범죄' 거론 및 "인권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기본대상은 미국"이라고 비난(10.2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를 조정해온 자료(일본 외무성 정보분석국장 이 쓴 '전후역사의 진실' 발간)와 관련, "미국은 국제테러의 왕초, 세계 최악의 인권 말살자, 세계 평화의 첫째가는 원쑤"라고 비난(11.13,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2. 일본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납치문제 담당상 발언 비난

- 마츠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 담당상의 ‘북한납치문제’ 발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야욕실현의 수단으로 써먹으려 한다”고 비난(7.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일본 정부, 유골문제 정치화” 비난

-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유골 반환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8.16)
 - “일본인 유골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유골반환을 위한 실무처리문제이고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그러나 일본당국은 지금 회담의 취지와 판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
 - 북한이 이처럼 일본 정부를 비난한 데는 이번 회담의 의제를 유골반환에 국한하고 쫓겨온 사안인 납치문제는 제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
-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며 공식 부인(9.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등, 일본의 과거청산 요구

-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 다른 국가에 저지른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북·일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10.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일관계의 기본은 과거청산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거청산이 없는 조일 관계(북·일관계)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일본에 납북자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과거청산을 요구했다고 보도(10.12, 교도통신)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조선인에게 저지른 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일본인 납북자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이 과거의 범죄행위를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납치문제로 여론을 오도해 정권 유지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
-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언급을 “역사적·법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10.1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이 역사왜곡행위(위안부 범죄 불인정, 평화헌법 개악,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매달리며 과거청산을 회피할수록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과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12.1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 건립된 일제강점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추모비 관련 “이것은 과거 죄행이 민심의 심판대 위에 올라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며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12.20,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등, 프리덤 하우스 국제언론자유보고서 내용 부인

-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북한, 최악의 인권 탄압국’ 재지목 ‘2012국제언론 자유보고서’ 발표(6.28)에 대해 “언론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부인(7.1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는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

- 북한이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이라며 강력히 반발(11.28,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유엔 총회 제67차 회의 제3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 날조 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

북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 폭우 피해 지원 요청

- 7월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이 유엔에 지원을 공식 요청. 유엔은 이에 따라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7.31)
 - 북한이 평양주재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 국제적십자사에 수해지원을 공식 요청함.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Christopher de Bono) 대변인은 “30일 유엔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발표
- 북한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올해 수해 상황을 집중 설명(9.10)
 - 유종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은 (최근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 회의에서 다른 사업은 얘기하지 않고,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며 “176명 사망, 22만 명 이재민 발생, 가옥 파괴 등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설명

4. 남한에 대한 반응

우리민족끼리, ‘탈북조장’ 대남 공세

- 북한이 박정숙 씨 귀환 이후 남한이 북한 주민들을 유인해 탈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탈북자와 관련하여 연일 대남 공세(7.9)
 -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나라 국경지대와 그 주변지역들에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노린 남조선정보원 요원들과 목사, 사업가 등이 득실거리고 있다.” “막대한 돈을 뿌려가면서 우리 주민 ‘유인, 사냥’을 하고 있다고 보도
 -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온갖 차별과 멸시, 감시와 통제 속에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살길이 막힌 사람들은 범죄의 길로 굴러 떨어지고 자살하는가 하면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영환·조명철 등 처단 협박

- 북한은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우리 최고존엄을 겨냥한 특대형 국가정치 테러 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책임 있는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체포된 월남도주자 전영철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괴뢰 패당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특대형 정치테러행위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7.31)
 -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유인, 납치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단을 비롯한 상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처단 대상자’로 김영환 북한인권운동가, 조명철(전 통일교육원장)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을 실명으로 지목

민족화해협의회, 대북지원단체와 수해지원 협의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8·15 광복절 이전에 수해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수해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팩스로 답신(8.24)
- 북민협이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협의를 위해 8월 24일 오전 방북, 개성에서 민화협 관계자와 대북 수해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 물품 등을 논의(8.24)

민족화해협의회, 대북지원 민간단체 방북 취소

- 대북 수해지원 논의를 위해 어린이어깨동무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초청했던 민족화해협의회가 방북을 하루 앞둔 8월 28일 오후 팩스를 보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는 “그만두자”며 접촉 취소를, 어린이어깨동무에는 접촉 연기를 각각 통보(8.28)

북한, “남측 민간단체 수해지원 받지 않겠다”

-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수해지원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정(9.3)
 -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이 최근 내부적으로 남측 민간단체의 소규모 수해지원을 일체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언

우리민족끼리, ‘국제펜대회’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괴뢰패당이 남조선에서 열리는 국제펜대회를 반공화국 인권소동마당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연일 비난(9.6)

노동신문, 수해지원 수용하고도 대남 비난

- 북한은 한국 정부의 수해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비난을 지속(9.11)
 - 노동신문은 ‘대결정권 타도는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일당의 악랄한 북남관계 파괴책동, 북침전쟁도발 책동은 절대로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동족대결에 환장해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 겨레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민족끼리, 북한인권영화제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9월 20일부터 진행된 북한인권영화제를 “모략날조적인 것”이라며 “땅 돌에 갈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쥐새끼들의 도발광대극”이라고 비난
 - “대본으로부터 시작해 연출, 촬영, 편집 등 일체 영화제작에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가 대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성립 될 수 없다”면서 “이는 결국 이명박 일당의 동족대결흥심으로부터 출발하여 고안해낸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역설(9.14)
 - 이어 “우리는 괴뢰패당은 물론 불순한 반공화국 인권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9.28)

우리민족끼리,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 언급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민주주의포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을 정신병자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
 -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난
 - “(인권위가) 북인권 나팔을 불어대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의 돌격대역할을 해왔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추악한 인간쓰레기들과 입맞춤을 하면서 이런 모략 광대극을 연출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난(11.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한의 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 비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북한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
-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 식민지이며 반인민 파쇼적 통치로 악명높은 남조선에 있다”며,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새누리당의 재집권 책동으로 앞날의 희망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12.6)

5. 분석 및 평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역공

- 미국 자체가 전후 일본 점령기간 동안, 미국이 개입한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미정서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자체의 인권문제를 희석
- 프리덤 하우스의 북한인권 비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 일본, EU가 배후에서 조종한 날조라고 비난하면서 서방 세력에 대응하는 ‘진보적 인류’의 단결을 촉구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에 과거청산 요구로 대응

- 일본의 역사왜곡을 제기하고 과거사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납치문제를 희석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동조 여론 형성 노력
 - 다만 기본적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희망

탈북 차단을 위해 탈북 귀환자 활용

- 북한이 탈북자 박정숙 씨의 귀환 이후 남한의 북한주민 유인 탈북을 주장하고 비난 공세
 - 북한체제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대북지원 거부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대북 수해지원을 협의했던 북한이 남측의 대북지원을 거부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종류와 양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대북지원이 남한에서 부각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
- 또한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거부
 - 북한은 한국 정부의 수해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표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국제적 활동 맹비난

- 9월 경주 국제펜대회가 ‘문학, 미디어 그리고 인권’이란 주제로 개최, 대회기간에 탈북작가 20여 명이 조직한 ‘북한 망명 펜센터’의 국제펜클럽 가입, 대회기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출신의 탈북자 김영순 씨를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공연되는 등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및 그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 움직임에 반발
-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11.27)되고, 유엔 총회에서 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12.20)되는데 대해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력하게 반발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9
2. 납북자	37
3. 국군포로	40
4. 이산가족	40
5. 분석 및 평가	43

1. 탈북자

통일부, ‘김정은 체제’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급감

-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7.1).
 - 5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610명으로, 1천 62명을 기록했던 2011년 같은 기간보다 42.6% 줄어든 수준임.
 - 1월 160명, 2월 90명, 3월 116명, 4월 107명, 5월 137명이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왔음.
 - 2012년 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이 국제적 이슈가 된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이 국경지역 마을에 신호 호출기를 설치하는 등 탈북자 단속과 체포활동이 눈에 띄게 강화됨.

탈북자 중국 감옥 잔류 희망

- 중국 지린성 창춘 감옥에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으로 송환되길 원치 않는 탈북자들이 죄를 크게 부풀려 장기형을 받고 있다고 함(7.2).
 -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면 다시 북한에서 ‘국경월경죄’로 재판을 받고 열악한 감옥에 가기 때문에 중국에 남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것임.

미국 국무부, “미국 입국 탈북난민수 135명”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가 총 135명으로 증가함(2012.7.3, 2013.1.3).
 - 2012 회계연도인 2011년 10월부터 6월 말(10월 2명, 1월 2명, 5월 2명, 6월 5명)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11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함.
 - 7월 6명, 8월 4명, 9월 1명, 12월 3명 등으로 2012년 입국자는 총 23명이며,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입국자는 총 149명임.

탈북자 가족들, 입금요청 전화 급증

-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 크게 늘고 있으며 연간 송금액은 1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함(7.12).
 - 중국 내 조선족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수료는 송금액의 30%에 이룸.

북한 선전물, 탈북자 증언 조작 편집

- 뉴포커스는 북한이 한국을 비하할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 선전물에는 북한이 탈북자라 주장하는 인물들의 발언을 교묘하게 조작한 장면과 악의적인 짜깁기가 가득하다고 전함(7.20).
 -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어디 가나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남조선 주민들보다 높고, 살 곳도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증언을 담고 있음.
 - “남한으로 끌려간 탈북자들 대부분은 주재국 대표부들의 지하실에 수개월 혹은 3년 이상 감금되어 짐승처럼 다뤄지고 있고 종교의 탈을 쓴 인신 매매꾼 고관들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인권 유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LiNK, 탈북자 구출

- 링크(LiNK)는 탈북자 100명 구출 캠페인을 시작한 2010년 이후 2년 반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힘(7.22, 10.15, 12.28).
 - 2010년 22명, 2011년 58명을 구출했으며, 특히 2012년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와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21명을 구출한 것은 성과라고 강조함.
 - 120개 지부가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며 ‘구출 바구니’ 캠페인을 펼쳤으며, 중국 내 탈북난민 1명을 동남아시아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미화 2천 5백 달러가 필요하여 후원자 모집과 모금 추진함.
 - 9월까지 추가로 16명의 탈북자를 구출하여, 총 117명의 탈북자를 지원함.
 - 12월까지 총 129명을 구출하였으며,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북한주민의 위기(The People’s Crisis)’라는 기록영화를 제작해 올해(2012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775회에 걸쳐 상영함.

탈북자, 라오스서 체포

- 북한인권선교회에 따르면, 7월 셋째주 라오스 북서부 루앙남타(Luang Namtha) 지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힘(7.23).
 - 라오스는 탈북자가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체포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송환하고 벌금 300달러를 내면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한 후 한국대사관으로 인계하고 있음.

북·중 국경 완전 봉쇄

- 지난 6월 군 검열단인 폭풍군단 검열이 끝났지만 지난달 15일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 북·중 국경 수비대를 집중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8.1).
 - 보위부 요원들이 초병들을 대신해 국경순찰까지 나서는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은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이번 검열은 최근 남한과 미국이 탈북자를 보내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감안하기도 함.

북한 청부 받은 중국 공안, 탈북자 엄중 단속

- 중국 공안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탈북자와 탈북자 지원단체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짐(8.2).
 -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북한 보위부가 핵심 탈북자나 북한인권 활동 인사를 지목하면 대신 단속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임.
 - 2012년 5월 투먼(圖們), 허룽(和龍) 등 두만강을 마주 보는 국경 도시에는 탈북자 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대대적으로 배포된 바 있음.

북한 공안 충성경쟁, 탈북 가족 갈취

- 북한의 양대 권력기관인 보위부와 보안서가 외화벌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필요한 돈을 탈북 가족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3).
 - 탈북난민운동본부는 “보위부로부터 돈을 갈취 당하는 탈북자 가족들이 최근 들어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면서 신중할 것을 당부함.

민간단체,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호소 사례

-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해 탈북자가 크게 줄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탈북 이후 중국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놓이는 사례들에 대한 구출 요청이 보고됨(8.6, 8.7).
 - 탈북난민인권연합은 10대 탈북소녀 2명의 경우 중국 인신매매단이 북한 측 브로커(중개인)들과 짜고 두만강을 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현지에서 파악했다고 밝힘.
 - 북한인권개선모임은 중국에서 폐결핵과 폐농양에 걸린 2명의 탈북 고아를 중국 내에서 치료할 수 없어 긴급히 태국으로 구출하였다고 밝힘.

중국 파견 북한근로자, 근무지 이탈

-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경험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이 올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중 10여 명이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짐(8.20).
 - “두만강과 접해 있는 지린(吉林) 성 투먼(圖們)·훈춘(琿春) 일대의 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중 10여 명이 최근 사라졌다”며 중국 공안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힘.

중국 동북3성, 탈북여성 인신매매

- 뉴스위크는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은 랴오닝(遼寧)과 지린(吉林), 헤이룽(黑龍江) 성이라고 보도함(8.20).
 -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북한 사람이나 조선족 남성이 접경지역의 도시 기차역 부근을 배회하거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모집하거나, 납치도 서슴지 않는 1단계, 모집한 북한 여성들을 국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 주로 지린(吉林) 성의 연변(延邊) 지역으로 보낸 뒤 일부 여성들을 이곳에 사는 조선족에게 팔아넘기는 2단계와, 또 다른 인신매매범들에게 남은 다른 탈북여성들을 팔아 넘기는 3단계로 이루어짐.

미국 국무부, 난민입국현황 보고서

- 미국 국무부는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서 7월에 탈북난민 6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힘(8.22, 9.6).
 - 8월에는 4명이 추가로 입국함.

- 국무부는 탈북난민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입국 경로와 배경을 공개하지 않으나 대부분 태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세계 40여 개 도시서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등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어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9.6).
 - “중국 정부가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인권 후진국처럼 처신한다면 세계인의 규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철회하고 이들을 원하는 나라로 보내라”고 촉구함.
 -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9일 하얼빈 공항에서 체포해 60일째 억류 중인 전재 귀 목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 목사가 탈북자를 도와준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와 사랑을 실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함.
 - 해외 300인 목사단이 주최한 강제 북송 반대 시위는 세계 4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됨.

캐나다 입국 탈북자 증가

- 캐나다 이민난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 상대적으로 난민들에게 관대한 캐나다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크게 늘고 있음(9.7).
 - 2011년 캐나다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탈북자는 전년도(176명)에 비해 2배가 넘는 3백 85명에 달함.
 - 현재 캐나다에 7백 명에서 9백 명 사이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서방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임.
 -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고, 북한에서 캐나다를 적대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점도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탈북 고아 입양 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북한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H.R. 1464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이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됨(9.12).
 -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 신속심의를 위한 절차인 ‘규칙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규정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법안을 제의한 에드 로이스(Edward Randall Royce) 의원은 법안 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힘.

중국 탈북여성 강제송환

- 중국에서 5년여간 체류한 30대 탈북여성이 최근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송환된 사실이 중국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짐(9.14).
 -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후베이(湖北) 성 어저우(鄂州)시 공안과 출입국관리 당국은 불법 입국·체류 혐의로 검거된 북한인 A(30·여) 씨를 지난 7일 지린성 연변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보도함(9.14).

탈북자 구출의 날 시위

- 자유시민연합은 중국이 유엔의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도 탈북자를 강제 복송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4회 '탈북자 구출의 날'(9.22)을 맞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함(9.21).
 - 중국이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 한국의 북한정의연대, 캐나다의 북한인권협의회, 홍콩과 핀란드, 스페인의 개인 참여자 등이 중국 공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을 규탄한다고 밝힘.

재외공관 보호 탈북자 295명

-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이 공관에서 보호하는 탈북자는 8월 현재 모두 295명임(10.5).
 - 이들 탈북자는 주로 동남아 지역의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입국 전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공관에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이민 탈북자 42명

-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가운데 해외 이민자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10.8).
 - 이들 42명 가운데 16명은 이민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당초 목적대로 현재 이민자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가운데 4명이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실패해 국내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며,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27조에 의해 '보호중지' 처분을 내림.

미국 상원의원, “북한 개혁, 탈북자 역할 중요”

- 존 카일(Jon Llewellyn Kyl) 미국 상원의원이 ‘현대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Modern-day underground railroad)’라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 개혁을 강조함(10.17).
 -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카일 의원은 세계 최악의 압제국가인 북한의 개혁을 위해 탈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중국, 탈북 북한 고위군관 체포 복송

-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으로 탈북했던 50대 북한군 고위장교가 탈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국가안전부에 붙잡혀 강제 복송된 것으로 알려졌다(10.25).
 - 김정은 체제가 이영호 등 군부 강경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일부 고위급 군관들이 탈북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설명임.

2012년 입국 탈북자 7년 만에 최저 전망

- 통일부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9월까지 입국한 탈북자가 1천 명 수준에 그쳐 2012년 입국하는 전체 탈북자 수가 7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10.28).
 - 9월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남성 303명, 여성 783명 등 총 1천 86명으로 나타남.
 - 월 평균 입국자는 120여 명으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 전체 탈북자는 1천 440명 정도로 2005년(1천 382명)과 비슷한 수준이 됨.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중 양측이 국경지역 단속을 강화해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의 소리, 탈북 중개 비용 증가

- 미국의 소리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가 계속 강화되면서 탈북 중개 비용이 크게 오르고 한국 입국 탈북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소식통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함(10.30).
 - 매주 북한측 동료들과 손전화기(휴대폰)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는 한국 내 탈북자 중개인은 한 번 도강하는 데 적어도 중국 돈 7천 위안, 미화로 1천 120달러를 국경 수비대에 바쳐야 중국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전함.

호주 탈북자, 이중 국적으로 추방 위기

-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호주 ABC TV는 최근 시사프로그램 ‘레이트 라인(Lateline)’에서 탈북자 70명이 호주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한국과 북한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로 간주되어 추방 위기에 직면한 탈북자 가족의 사연을 자세히 보도함(11.1).
 - 호주 이민국 대변인은 “호주에 남을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만 호주를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호주 정부는 국제적 의무가 충족될 경우에만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힘.

탈북 고아, 라오스 한국 대사관 진입

-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과 어린이 등 3명이 현지 선교사의 안내로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음(11.7).
 - 이들은 탈북한 뒤 중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 라오스 주재 태국 영사관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일부 지방서 탈북자 단속 완화

-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318파트너스’를 인용하여,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탈북자 단속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12.28).
 - 중국 공안 관계자에게 ‘탈북여성을 체포하지 말라’는 내부 문건이 내려왔다는 전언을 밝히면서, “탈북자가 교통, 통신, 전기 등을 담당하는 중국 지방정부 관련 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기도 한다”며 “탈북여성은 하루 60위안, 남성은 100위안을 받는다고 한다”고 설명함.

북한, 탈북자 처벌 강화

-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됨(2013.1.2).
 -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 28일과 7월 21일, 10월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으며, 북한은 마지막 형법 개정에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됨.

2. 납북자

일본 납치 담당상, 납북자문제 강경대처 표명

- 마츠바라 진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7일 까지 납북자문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일본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뜻을 표명함(7.16).
 - 마츠바라 담당상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집회에 참석 후 향후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메시지나 단서를 보이지 않으면 일본도 강경한 자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이는 대북 제재 강화 가능성으로 해석됨.
 -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선언 당시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일본 44개 광역단체, 북한 납치문제 조기해결 요구

- 일본의 4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의 44개 도도부현 의회가 일본인 피랍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8.2).

-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이후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등 8명은 숨졌다고 주장하였음. 이후 일본 측이 요코타 메구미 사망 관련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음.

북한, 납치문제 의제화 향후 조정

- 북한은 북·일 교섭에서 일본인 납북자문제의 의제화 여부를 향후 협의에서 조율하기로 함(9.1).
 - 북·일 교섭에 북한 대표로 참석했던 유성일 외무성 일본과장은 9월 1일 납북자문제의 의제화 관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함.
 - 북한과 일본은 4년 만에 재개된 정부 간 교섭에서 향후 교섭의 수준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해, 이달 베이징에서 본회담을 열고, 향후 협의에서 쌍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의제로 광범위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함.

정부, 전시납북자 364명 추가 인정

- 정부는 6·25전쟁 기간 북한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364명을 전시납북자로 추가 인정함(10.15).
 - 2010년 말 출범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천 107명을 전시납북자로 인정함.
 - 위원회가 전시납북자로 인정하는 대상은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군인 제외) 가운데 6·25전쟁 기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임.

6·25납북자가족, 유엔에 생사확인 진정서 제출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납북가족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힘(10.29).
 - 진정이 접수되면 실무그룹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가족회는 10월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순방하며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촉구할 예정임.

북한,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

-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알려짐(11.22).
 - 교도통신은 북한이 납북 피해자 합동조사위원회 설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국장급 회담 재개를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11월 몽골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 측 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가 납북자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함.

KAL기 납북자 관련 증언대회 개최

- KAL기 납북자 관련 증언대회가 고려대에서 개최됨(12.27).
 -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 문제가 43년간 해결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촉구함.
 - KAL기 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기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된 사건임.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돌려보냈으나, 11명은 자진입북자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강제억류 중임.

일본 경찰청, 실종자 868명 납북 가능성 조사

- 일본 경찰청이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가 868명이라 밝힘.
 - 일본 경찰청 외사과는 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실종자가 11월 1일 기준 868명이라고 공개함(12.29).
 - 실종자 분포는 홋카이도 경찰 관내(81명), 오사카(65명), 경찰청 본청(58명), 니가타(46명), 가나가와(45명) 등임.

3. 국군포로

생환 국군포로와 물망초 간담회 개최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생환 국군포로와 물망초 간담회'가 7월 6일 개최됨(7.6).
 - 사단법인 물망초(박선영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의원)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1994년 목선을 타고 탈북한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최근 18년간 한국에 입국한 국군포로 80명 중 고령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25명이 참석함.
 -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들은 정부가 국군포로 생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군포로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북한에는 현재도 350명가량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재미동포들, 국군포로 지원 의사 표명

- 미국 월가에서 펀드매니저로 성공한 1.5세대 젊은 재미동포들이 북한에서 생환한 고령의 국군포로 지원에 나섰다(7.6).
 - 이들은 7월 6일 개최된 '생환 국군포로 간담회'에 참석, 2004년 탈북한 한철수(89) 씨를 비롯해 양한섭(88)·유중호(88) 씨 등 80대 국군포로들을 만났으며, 국군포로 출신을 위한 요양원 건립 지원 의사를 밝힘.
 - 6·25전쟁 때 포로로 붙잡혀 북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극적으로 탈북해 한국에 돌아온 국군포로는 총 80명으로 그중 생존자는 57명임.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임.

4. 이산가족

통일부, 남북간 이산가족 교류재개 추진

- 통일부는 7월 30일 이산가족 교류재개 관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함(7.30).
 - 이는 3년마다 관련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 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후 이번 발표가 처음임.

-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올해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내년부터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정상화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통일부는 경비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함.

북한,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안 거부

- 북한이 남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함(8.10).
 - 유증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8월 8일 북한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이달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열자고 제안함. 이에 대해 조선적십자회는 9일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함.
 - 이 같은 북측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오길남 씨, 이산가족 상봉 신청 계획

-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는 북한에 있는 두 딸을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예정임(9.3).
 - 허현준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오 씨가 9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힘.
 - 또한 오 씨와 대책위,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은 9월 6일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북한대표부에 서신을 전달할 계획임.

통일부,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 김천식 통일부차관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9.30).
 - 김 차관은 ‘제43회 재이북부조(在以北父祖) 합동경모대회’ 격려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함.

- 김 차관은 지난 2월과 8월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함.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위축 지속

-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10.1).
 - 9월말 기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총 10건(생사확인 6건, 교류지속 4건, 상봉 0건)으로 집계되었음. 올해 전체 건수는 199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큼.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지난 2007년 542건,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2011년 28건(생사확인 3건, 서신교환 21건, 제3국 상봉 4건)으로 줄었음.

이산가족 신청자 41% 이미 사망

- 2010년 18차 상봉을 끝으로 중단된 이산가족의 41%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10.10).
 - 10월 10일 공개된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적십자에 '이산가족 신청'을 한 12만 8천 747명(올해 8월 말 기준) 중 41%인 5만 2천 744명이 이미 사망함. 또 70세 이상 생존자 6만 271명 중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난 사람의 비율은 3.3%에 불과함.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은 90세 이상이 5천 714명(7.5%), 80대 2만 9천 444명(38.7%), 70대 2만 5천 113명(33.1%), 60대 9천 361명(12.3%), 59세 이하 6천 371명(8.4%) 등 70세 이상 고령자가 79.3%를 차지하고 있음.

한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계획 발표

-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작업계획을 밝힘(12.7).
 - 한적은 7일 영상편지 제작을 희망한 1만 6천 800여 명 중 고령 및 건강, 가족관계 등 감안, 800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12월 10일부터 영상편지 제작 작업을 개시할 것임을 밝힘.
 - 한적은 2005년에도 4천여 명을 선정해 영상편지를 제작했고, 2008년에는 기존에 상봉했던 이산가족들 중 남북 각각 20가족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교환하기도 함.

5. 분석 및 평가

국내 입국자 감소 추세 지속

- 2012년 국내 입국 탈북자는 총 1천 508명으로 2011년 2천 706명의 56%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것에 기인함.
 - 2012년 하반기에는 국내 탈북자 감소추세가 다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요청에 따라 중국 공안의 탈북자 및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입국자가 급감함.
 - 국내 입국 중개인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 입국을 요청하여 밀고하는 스파이 활동들로 인해 중국에서 인근 동남아국가로 이동시 위험부담 증가로 입국중개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정착가족들의 가족입국지원 희망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국중개인들의 활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입국자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탈북자 재입북

- 북한은 재입북한 박인숙, 전영철, 김광혁·고정남 씨 가족을 내세워 기자회견 등 대대적인 체제 선전도 벌이고 있으며, 북에 있는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탈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재입북자들을 동원한 체제 선전을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탈북자 강제 복송 금지 시위지역 확대

- 국내외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연대하여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복송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함.
 - 중국의 유엔난민협약 가입일(9.22)을 탈북자 구출의 날로 제정하고, 연대 시위활동 등을 펼침.

- 시위지역을 스페인, 핀란드 등으로 확대하여, 탈북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함.

6·25전쟁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위한 민·관 협력 기대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10월 기준, 총 1천 107명의 납북자수를 확정할 바, 향후 민간과 정부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노력이 요구됨.

생존 국군포로에 대한 지속적 관심 촉구

- 한국에 거주하는 57명의 국군포로와 북한에 거주하는 350명가량의 국군포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이산가족문제의 남북한 협력 필요성

- 이산가족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바, 정부의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제7권 2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